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10월 15일(월) 배포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협력팀
김현주 선임전문원 Tel.02-3299-1263

한-WB 공동 KSP 지식공유포럼 KSP를 통한 개발정책 논의의 지평 확대

- 기 간: 2012년 10월 15(월) ~ 16(화)
- 장 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주 최: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기획재정부 · 세계은행

- 세션 3. 제도 발전과 공공부문 개혁 요약 -

발표 1. 제도변화와 역량발전을 위한 리더십 개혁

제니퍼 위드너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 재산권 확립, 법치, 조세제도 개혁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개혁은 오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보장 할 수 없음.
 - 특히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의 제도개혁은 거의 실행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임.
- ☐ 제도개혁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와이드너 박사는 제도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기득권 세력이 제도 개선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 내지 병행되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음.
- 대통령 및 각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개혁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재 발굴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발표 2. 세계은행과 거버넌스: 논의의 진전

로버트 베셀 (세계은행 PREM 공공부문 선임연구원)

- ☐ 세계은행에서는 42억 달러 규모의 공공부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1989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 ☐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국가의 등장, 민주주의의 팽창, 국가의 역할과 규모의 축소, 분권화, 전자정부(E-Government)의 성장 (한국 1위), 새로운 공공 관리의 등장, 반 부정 부패와 투명성 증진은 최근 국제동향임.
- ☐ 성공적인 공공재정관리 (Public Financial Management)를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와 관세의 개혁이 필요함.

발표 3. 원조 의존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자립경제로의 전환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에 대규모 원조에 의존. 대부분의 타 수원국의 경우 원조가 국민의 의타심 등을 조장하여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음. 한국은 어떻게 원조경제에서 고도성장, 자립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는가?
- 한국의 1960년대 중후반에 추진된 세정개혁은 한국의 원조의존경제 → 자립경제로의 전환의 시발점
 - 1950년대~60년대 전반기의 한국의 재정수입은 미국의 원조자금(對充자금)에 크게 의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 지속
 - 재정적자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해 보전됨에 따라 만성적인 高인플레이 등 거시 불안정 초래
 - 당시 탈세관행은 3대 사회악(밀수, 탈세, 도벌)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극심. 당시 한국의 재정은 상당부분 원조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세무행정 개선유인이 크지 않았음.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왜곡된 납세의식(탈세를 항일운동으로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 납세자는 탈세를 부도덕한 범죄로 인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한 방편으로 보는 경향
 - 한국은 1966년 국세청 설치를 계기로 강화된 세무행정력(capacity to raise taxes)으로 단시일내에 세수기반이 획기적으로 확충됨.
 - 1966~69년: 연평균 세수증가율 51.2%
 - 재정수입 해외원조 의존도:
'65년 34.2% → '70년 5.3% → '74년 0% (재정자립 달성)

□ 한국의 세정개혁 성공요인

- 상·중급 세무공무원의 인사혁신을 통한 기강 확립: 전국 6대 도시 소재 세무관서의 주무자급(6급)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중시한 인사원칙에 따른 전면적 인사전보조치 추진
- 세무사찰체제 일원화: 기존의 검찰, 경찰, 재무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세무사찰체제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보호와 국세행정의 정상화 도모
 - 1966 - 1970년 기간 중 총 5,662건의 세무사찰 추진 (표 참조)
- 성실신고제도 도입: 녹색신고제를 도입하여 자진신고 납세풍토 조성 (녹색신고 납세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 등 유인제공)

<표> 租稅犯則 조사: 1966-1995

	조사건수	추징실적 (백만원)			범칙 처리내용 (건수)		
		계	추징세액	벌과금	통고	고발	무혐의
1966-70	5,662	5,5941	3,919	2,022	3,969	50	1,643
1971-75	2,186	20,582	17,467	3,115	1,670	152	364
1976-80	1,611	75,149	66,535	8,614	1,256	250	105
1981-85	784	85,342	79,905	5,437	565	118	101
1986-90	98	76,467	75,919	548	33	64	1
1991-95	57	136,382	136,163	219	5	52	-

자료: 국세청 30년사 (1996), p1266

□ 한국의 세정개혁은 경제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 세수기반 확충에 따라 재정건전도가 획기적으로 개선(그림 참조) 시킴으로써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은 물론, 외자 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공업화 정책 추진에 기여

- 1962년에 차관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중반까지 차관도입 실적은 극히 부진
-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등 지역개발,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물자지원(시멘트, 전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등 “동반성장” (shared growth) 달성에 기여

토론 1.

메레디스 우 (버지니아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 불과 몇십년 전 가장 후진적인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자립적인 경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경제적, 정치적 변혁 때문이라는 것은 가장 주목할 점이며, 한국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였음.

토론 2.

좌승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음. 성과중심 인센티브 제도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시장에서 성공한 행위자에게 차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성과중심 제도가 필요함.
- 그러나 시장만으로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높은 거래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정부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스스로 돕는 자에게 자원은 배분, 지원하는 차별적 사회정책이 이루어 져야 함. 호혜평등적인 정책은 사회 발전 및 개발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킴.